



주간통일정세 2011-32(2011.08.01~08.0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3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청년신문에 김정은 찬양글…우상화 본격화(8/1, 연합뉴스)**
 - 북한의 청년조직 기관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실어 세대교체의 가속화를 예고
 - 1일 연합뉴스가 북한 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한 결과 북한의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는 지난달 31일자 2면에 전설적 위인이신 김대장 선군의 총대 높이 드셨다는 제목의 글을 지면의 3분의 1가량 차지하는 톱으로 게재
 - 김정은을 찬양하고 후계체제의 당위성을 강조한 이 글은 같은 날 조선중앙TV가 주요 신문에 실린 기사를 소개하는 오늘호 중앙신문 개관'에서도 다뤄져 북한 전역의 주민들에게 소개
 - 북한이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 등 주요신문이 아닌 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에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실은 것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北총리, 황해도 수해지역서 협의회 열어(8/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황해남도 청단군 청정리와 심평리 등 큰물(홍수) 피해지역을 돌아보고 협의회를 갖는 등 현지 요해(파악.了解)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최 총리는 수해지역 요해에 앞서 평안남도 온천군의 운하·금당협동농장을 돌아보고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어 알곡 수출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北 "동아시아 안정 위해 북미 관계 개선 필요"(8/2, 연합뉴스)**
 - 북미 고위급 대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일(현지시각)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미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필요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제1부상은 이날 뉴욕에서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등 민간단체 주최로 열린 한반도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나서 숙소인 밀레니엄 호텔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토론회에서 북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핵, 남북 대화, 식량 지원, 인권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얘기했지만, 각 사안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뉴스는 전함.

● **림경만 北라선 책임비서, 中다론허 시찰(8/3, 신상보)**

-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 중인 림경만 북한 라선특별시 책임비서가 다론허(大連)을 방문, 항만 등을 시찰했다고 현지 언론인 신상보(新商報)가 3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림 비서 일행은 지난 2일 탕진(唐津) 다론허시 서기와 만나 양측 간 경제 협력과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
- 림 비서 일행은 탕 서기 면담에 앞서 다론허 경제기술개발구를 방문해 항만 건설과 운영, 도시 녹화 사업 등을 둘러봄.
- 림 비서의 이번 다론허 방문은 북한이 라진항 개발 모델로 삼으려는 다론허 3호 부두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

나. 경제

● **北 라선시 대표단, 中선양 방문(8/1, 심양일보)**

- 림경만 북한 라선시 책임비서 일행이 지난달 31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를 방문, 쟁웨이(曾維) 당서기 등 선양시 간부들과 만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심양일보(瀋陽日報)가 1일 보도
- 이날 면담에는 리기범 주선양 북한총영사와 마잔춘(馬占春) 선양시 비서장 등이 배석했다고 신문은 전함.
- 림 비서의 이번 선양 방문은 이 지역 기업들의 라선 투자 유치를 끌어내는 한편 라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의 진척 상황을 설명하고 랴오닝성이 황금평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

● **정부, 밀가루 이어 대북 장비지원도 첫 승인(8/1, 연합뉴스)**

-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승인한 정부가 말라리아 초음파 진단장비의 대북 반출도 승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태 등이 우리 국민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다른 물자와는 다른) 별도의 반출 기준을 적용했다"며 "말라리아 장비가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략물자관리위원의 판단과 기생충학회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

● **민화협, 北사리원에 2차분 밀가루 300t 지원(8/2,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김덕룡 대표상임의장)는 2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주민을 돕기 위해 밀가루 300t(1억8천만 원 상당)을 개성 육로를 통해 지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번 지원은 지난달 26일 밀가루 300t을 지원한 데 이어 1주일 만에 다시 2차분을 보낸 것으로 '굿네이버스'와 '남북평화재단' 함께 나누는 세상'의 성금으로 마련되었으며, 민화협은 매주 화요일 밀가루를 보내 8월 말까지 총 2천500t의 밀가루를 지원할 계획
- "北 수해로 농작물 수확량 10% 감소 예상"(8/2,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도 등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작물수확량이 최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일 "벼 경작지가 많은 황해도와 평안남도 등지에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크다"며 "북한의 취약한 농업 인프라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농작물 생산량은 작년(450만t)보다 약 10% 감소한 400만t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최근 황해도 등 홍수 피해 지역을 돌아본 유엔 합동수해현장 실사단에 참가한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를 인용해 "곡물생산에 대한 홍수의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긴 이르지만 밀, 감자, 보리 등 조기 작황 곡물과 주곡물인 쌀 등의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
- 국제적십자, 北수해복구에 58만 달러 긴급지원(8/3,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IFRC)가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58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외신이 3일 보도
 - 외신들은 "IFRC가 북한 수해복구를 위한 재난 긴급구호 기금으로 58만 2천194달러(약 6억1천6백만 원)를 배당했다는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고 전함.
 - 보고서는 "IFRC는 특별예산으로 수재민에게 식량 이외의 구호품을 제공하고 수해지역 현장실사, 수재민 파악 및 등록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황해도와 함경남도 내 10개 군에서 2012년 2월까지 6개월간 복구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
- FAO "北 쌀 수확량 작년보다 1% 늘어날 듯"(8/4, 미국의소리(VOA))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향후 기상이변이 없다면 올가을 북한의 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약 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
 - FAO는 '쌀시장 모니터' 보고서에서 "작년에는 봄에 이상저온 현상으로 벼씨 파종 시기가 늦어졌지만 올해는 이런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기상이변이 없는 한 9월 북한의 쌀 생산량은 도정(쌀 껍질을 벗겨냄) 후 기준으로 작년 가을 쌀 수확량보다 1% 늘어난 1백6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



- **北, 수해지원 품목으로 식량·시멘트 요청(8/4, 연합뉴스)**
 - 북한은 4일 정부의 수해지원 제안과 관련해 지원 품목으로 식량과 시멘트를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수해지원 품목으로 식량과 시멘트 등 물자와 장비를 제공해 달라"고 밝혔다
- **"北 하나전자 '자본주의 경영' 첫 도입"(8/5, 미국의소리(VOA))**
 - 유럽계 투자회사가 북한에 설립한 '하나전자'가 품질보증 등 자본주의 경영기법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함.
 - 홍콩에 본부를 둔 유럽계 투자회사인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는 최근 이 방송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조선하나전자합영회사'가 북한 최초로 품질보증과 대리점을 통한 판매 등 서구식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힘.
 - 하나전자는 자사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6개월 내 무료로 반품을 받아주는 품질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대리점을 개설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제품광고도 시도하고 있다고 이 회사는 전함.

다. 군사

- **北, 논란 속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데뷔(8/5, 연합뉴스)**
 - 북한이 논란 속에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의장국으로 데뷔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서세평 주(駐)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4일(현지시각)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군축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으며, 이날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참석했으나 북한이 순회의장국을 맡은 것에 항의해 이 기간 군축회의에 잠정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캐나다를 불참
 -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인 리장곤 공사는 회의에서 "북한은 전 세계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늘 지지해 왔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회원국들에 군축회의의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호소

라. 사회·문화

- **北 "수재민 8천명, 농경지 6만정보 침수"(8/1,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지난 6월 태풍 '메이리'와 7월 폭우로 살림집 2천900여 채(황해남도 2천200여 채)가 파괴되고 8천여 명의 주민이 가설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중앙통신은 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센 바람과 갑자기 불어난 큰물(홍수)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행방불명자가 발생했고 6만 정도(595km²)의 농경지가 침수·매몰·유실돼 올해 알곡생산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함.
- 이와 함께 중앙통신은 "170여 동의 생산 및 공공건물이 무너졌고 산사태와 옹벽 파괴로 도로·다리가 끊어졌다"며 "고압철탄 1개를 비롯한 300여 대의 전주대(전봇대)가 넘어져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8천400여 그루의 가로수가 넘어졌다"고 밝힘.

● **北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개막(8/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1일 저녁 평양 5월일경기장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중앙통신은 "이번에 창조집단은 위대한 당의 영도에 따라 경이적인 사변들을 창조해나가고 있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과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새로 창작하고 형상화했다"고 밝힘.

● **北 "수해지역서 균중적 복구사업 활발"(8/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방송은 2일 황해남도 청단군 등 폭우 피해를 본 지역에서 복구작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 최근 이어진 폭우와 홍수로 황해도, 강원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주택과 농경지를 비롯해 공공건물, 공장, 도로, 다리, 철길, 제방이 파괴·매몰·침수됐다고 전하며 "피해지역에서 복구사업이 균중적으로 힘 있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힘.
- 가장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진 청단군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청단군 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일군들이 짧은 기간 안에 피해를 가시도록 조직 사업을 짜고 들고 있다"며 "침수된 농경지들에 대한 고인물 빼기와 농작물 살리기, 도로 및 살림집 복구 사업이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함.

● **장군님 한마디에 평양서 '장미심기 운동'(8/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수도 평양 전역에서 때 아닌 '장미심기 운동'이 펼쳐지면서 주민간에 '장미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
- 최근 북한 관광을 마치고 돌아온 한 중국인은 평양에서 장미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과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베이징 거리에 심어진 장미를 보고 "장미꽃이 보기 좋다. 평양에도 심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RFA에 전함.
- 실제로 북한은 '2012 강성대국 진입'을 앞두고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꾸미려면 "할일이 대단히 많다"며 주민들을 독려



- **유니세프 "北 모유수유율 90% 육박"(8/5,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6개월 미만 신생아 중 88.6%가 모유 이외에 물을 포함한 어떠한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 '완전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5일 전함.
 - 방송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지난 2009년 북한 당국과 함께 북한 전역의 7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완전모유 수유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은 북한 보건성이 정책적으로 완전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한편 유니세프 조사결과 24개월 미만 북한 어린이 가운데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급식을 받고 있는 어린이 비율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평양서도 아이패드로 인터넷 접속 가능"(8/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도 미국 애플사의 최신 휴대용 컴퓨터인 아이패드(iPad)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
 - 최근 방북한 미국인 전문가는 북한 내 유일한 휴대전화 업체인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 텔레콤'의 외국인 직원이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최신형 아이패드를 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RFA에 전함.
 - 북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대남기구나 당 총정치국 정도이지만 최근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이나 평양과학기술대학, 김책공대 등에서도 학습목적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알려짐.
 - RFA는 북한에서 곧 아이패드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는 현지 체류 외국인이나 북한의 일부 최고위층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내다봄.
 - '북한 내 아이패드 사용'을 전한 미국인 전문가는 또 평안북도 향산군과 묘향산 인근 향산호텔 객실에서 CNN, MTV 등 외국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인터넷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북한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외부세계와 접속이 점차 확대되는 것 같다고 말함.

- **北 "7월 하순 폭우로 30여명 사망" (8/5, 연합뉴스)**
 - 북한은 7월 하순 내린 집중호우와 큰물(홍수) 피해가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30여 명의 사망자 발생, 6천480여 동의 살림집(주택) 파괴, 1만5천800여명의 주민이 집을 잃고, 또 4만8천여 정보(476km²)의 논과 밭이 침수되거나 매몰·유실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음. 북한 매체가 올여름 폭우에 따른 구체적인 인명피해 숫자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임.
 - 중앙통신은 이어 "생산건물과 공공건물 350여 동이 무너지고 강·하천과 해안방조제 물길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산사태로 철길 노반이 파괴되고 6천900여m의 다리와 도로가 끊어져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과 복구용 자재의 수송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음. 특히 "황해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적 및 물질적 피해가 났다"고 강



조함.

- 연합뉴스가 이날 입수한 국제적십자사(IFRC)의 내부 자료인 재난관리 정보시스템(DMIS)에서도 북한 당국이 이번 폭우 피해를 집계한 결과 황해남도에서만 사망 26명, 실종 4명에 8명이 다치고 8천860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파악됨.
- IFRC는 황해남도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체 추산한 결과 연안군, 청단군 등지에서 2천901채의 주택이 완파되면서 주민 96명이 부상하고 2만8천4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함. 이에 따라 IFRC는 북한의 수해 복구 용도로 시멘트와 철근이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의 응급구호물자 지원을 북한적십자사(북적)와 공동으로 요청했음.

2. 대외정세

가. 일반

- **美 "北, 핵프로그램 전 세계에 투명히 공개해야"(8/2, 연합뉴스)**
 - 미국은 1일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핵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에 이같이 반응
 - 그는 또 뉴욕에서 열린 북미회담 결과와 관련, "좋은 만남이었으며 건설적이었다"고 거듭 평가한 뒤 "6자회담 국가들과 향후 조치들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 **中합대, 15년 만에 北 방문(8/2, 신화통신)**
 - 신화통신은 중국 해군훈련합대 소속의 정허(鄭和)호와 뤼양(洛陽)호가 이날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러시아태평양함대의 본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했다고 보도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 합대의 북한 방문은 지난 1996년 이후 15년 만에,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北 "日 영토야욕 도를 넘어서고 있다"(8/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일본의 영토 야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행위를 맹비난
 - 논평은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시회를 수도(도쿄)의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벌려놓는다고 한다"며 "도쿄에서 독도 모형과 지도, 독도로 건너갈 수 있는 면허증까지 공공연히 전시하고 오만방자한



높음판을 벌이는 것은 일본의 끝없는 영토 야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

● **메드베데프 대통령, 김정일에 수해위로 전문(8/3,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북한의 수해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큰물(홍수)로 많은 인명피해와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해 진심으로 위문을 표시 한다"며 "사망자들의 유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동정을 전해줄 것을 부탁 한다"고 밝힘.

● **패네타 "긴밀히 北 주시 필요"(8/5, 연합뉴스)**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4일 "우리는 이란, 북한에서 나오는 위협도 갖고 있다"면서 "이들을 긴밀히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패네타 장관은 이날 펜타곤에서 가진 예산삭감 문제와 관련된 기자회견 도중 미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한 질문에 알-카에다 등의 위협을 지적하면서 이란과 북한이 "핵능력을 가질 위협"이 있다고 말함.
- 한편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중국 방문과 관련,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면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그들이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국과 계속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힘.

● **北-캄보디아, 교류·협력 협정문 체결(8/5, 자유아시아방송(RFA))**

- 캄보디아가 최근 리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과 보리트 캄보디아 외무차관이 맺은 '경제무역 협력 강화'에 대한 협정문을 공개했다고 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이번 협정문에는 '북한과 캄보디아가 경제, 무역, 지식정보, 해양교통, 투자, 외교, 문화 등 7개 분야에서 두 나라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과 양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음.

● **北-美적십자, 이산가족 서한교환 합의(8/6, 연합뉴스)**

- 지난 5월 북한과 미국 간에 재미 이산가족 10가족의 서한을 시범적으로 교환하자는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짐.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6일 "미국 적십자사 고위관계자와 유엔주재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접촉해 적십자사 간에 통용되는 레드크로스 메시지 방식을 통해 시범적으로 이산가족 간 서한 교환을 추진하고 이후에 상봉을 논의해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힘.
- 그러나 이 관계자는 "상봉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로 이 합의가 실행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근 북미대화



에서 이 문제가 다루졌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외무성이 관련돼 있어 관련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함.

- 최근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뉴욕을 방문해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만나는 등 북미간의 대화가 이어지는 분위기임.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북미적십자사 간 합의가 있었다면 북미대화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 관련 대화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들은 얘기가 없다"고 말함.

● 美 "北 수해상황 주시 중, 긴급지원 지지" (8/6,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5일 대변인실 명의로 "우리는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최근 발생한 수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하에서의 북한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국제적 모니터링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지지 한다"면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은 어떤 정치적, 안보적 이슈와는 관련돼 있지 않다"고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
- 이런 입장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수해지원 요청이 들어올 경우 철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일정한 정도의 의료, 생필품 등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 발표로 해석됨.

나. 6자회담(북핵)

● 北 "북미회담,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8/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이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밝힘.
- 대변인은 이어 "쌍방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며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각 측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했으며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 또한 그는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속히 재개하고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9·19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가려는 북한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말함.

● 中, '6자회담 조속재개' 北 주장 지지(8/2, 연합뉴스)

- 중국이 조건 없이 북핵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 이익에 부합 한다"며 지지하고 나섰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중국 외교부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 이익에 부합 한다"면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진전의 기회를 포착,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희망 한다"고 말함.

● 김계관·우다웨이 회동한 듯.. 6자 논의(8/4, 연합뉴스)

-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4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김 부상이 우다웨이 특별대표를 포함한 중국 측 6자회담 라인을 접촉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 부상은 필요에 따라 5일 중국 측 항공편 또는 6일 고려항공편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외교가에서는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김 부상에서 리용호 외무성 부상으로 교체됐지만, 김 부상은 오랜 카운터파트였던 우다웨이 특별대표를 직접 만나 지난달 28~29일 '뉴욕 북미대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추정

3. 대남정세

● 北 "금강산 재산처분은 인내 끝에 내린 조치"(8/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북한 당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실천적 처분 조치'와 관련, "최대의 성의와 인내 끝에 내린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
- 이 매체는 이날 논평에서 "현대 독점권이 취소되고 금강산특구 내 남조선기업들의 재산정리 문제가 나서게 된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조선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우리가 오랜 기간 참을성을 발휘한 것은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으로서의 금강산관광의 의의와 가치를 귀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함.
- 이어 "우리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선포한 것은 국제법적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국제법과 관례를 놓고 책임과 대가를 따진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남조선당국에 대고 우리가 따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

● '잘나가는 개성공단'...상반기 교역액 19%↑ (8/3, 연합뉴스)

- 남북 경색 국면에도 올해 상반기 개성공단 교역규모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3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성공단사업을 통한 남북 교역규모(반입·반출 포함)는 총 8억2천588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 교역규모인 6억9천109만 달러보다 19.5%(1억3천479만5천 달러), 2009년 3억5천24만 달러에 비해서는 135.8%(4억7천564만 달러)나 늘어난 것임.
- 반면 일반교역(광산물·농림수산물 등)·위탁가공 등의 상업적 교역,



인도적 지원·사회문화교류 등의 비상업적 교류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전체 교역 규모는 8억3천278만 달러로 작년 9억9천412만 달러보다 1억 6천134만3천 달러(16.2%) 줄어 듬.

- 이는 정부가 작년 천안함 사태 이후 5·24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한 교류를 전면 중단했기 때문으로 분석

● 정부, 北에 50억 원 규모 수해지원 제의(8/3, 연합뉴스)

- 정부는 3일 북한 지역의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측에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보낸 통지문에서 "한적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구호물자를 지원키로 했다"면서 "지원물자는 생필품 및 의약품 등 50억 원 상당의 물품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고 제의

● 北, 美서 새 금강산 사업자 선정(8/3, 연합뉴스)

- 미국 뉴욕의 한국계 무역회사인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는 북측과 금강산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지난달 25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양해각서는 이 회사가 미주지역에서 금강산 관광 선전과 투자유치, 관광객 모집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금강산을 복합형 관광 휴양지로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포함
- 이 회사 박일우 대표는 "금강산 관광개발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난주 평양지사의 직원이 내 지시를 받아 북한 정부 측과 MOU를 체결했다"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북한을 직접 방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다듬을 생각"이라고 말함.

● 北 '컴퓨터 영재' 대남 사이버 침투(8/4, 연합뉴스)

- 북한 해커들을 끌어들이며 국내 게임아이템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프로그램 제작·배포한 일당이 적발되면서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사이버 범죄를 광범위하게 저질러온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범행에 가담한 해커들은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키운 최고 실력자들인데다 수법 역시 디도스 등 사이버테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돼 두 차례 디도스 공격과 농협 전산망 해킹에 이어 북한이 언제 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구속된 '오토프로그램' 제작·공급 총책 정모(43)씨 등의 진술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이들이 영입해 국내 온라인게임 서버를 해킹한 북한 해커는 모두 30여명으로 이들은 모두 북한 최고 명문대인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 출신임.



- 또한 경찰 관계자는 "북한이 4~5년 전부터 외화벌이 수단으로 오토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러는 사이에 해킹 수법도 발전을 거듭했다"며 "오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를 심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나중에 대남 사이버테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장치로 판단된다"고 말함.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北, 핵프로그램 전 세계에 투명히 공개해야"(8/2)

- 미국은 1일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핵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우리늄 농축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에 이같이 반응했음.
- 그는 "우리는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북한의 구체적인 신호들을 계속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또 뉴욕에서 열린 북미회담 결과와 관련, "좋은 만남이었으며 건설적이었다"고 거듭 평가한 뒤 "6자회담 국가들과 향후 조치들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번 회담은 탐색적 회담이라는 것을 밝혔다"면서 "경천동지할 돌파구를 기대했으나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 밖에 그는 '미국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북한 외무성의 발표에 대해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 6자회담 관련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음.
- 이와 함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둘째 날 북미대화 참가와 관련, 미국은 북한에 대해 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 中, '6자회담 조속재개' 北 주장 지지(8/2)

- 중국이 조건 없이 북핵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 이익에 부합 한다"며 지지하고 나섰다.
- 중국 외교부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 이익에 부합 한다"면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진전의 기회를 포착,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희망 한다"고 말했음.
-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속히 재개하고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가려는 북한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말해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했음.
- 대변인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미국에서 북미 회담을 가진 소식을 전하면서 "고위급회담에서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이 진지하고 건설



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 북미대화 북 대표단 "회담에 만족"(8/3)

- 북미 고위급 대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한 대표단이 방미 일정을 모두 끝내고 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을 떠났음.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공항으로 출발하기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에 만족한다"면서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 부상은 또 "다자회담 전에 쌍무적 만남이 계속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에 북미 간, 남북 간 대화가 더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음. 김 부상을 뉴욕 존.F.케네디 공항까지 배웅한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대화는 당연히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서로 화해하고 안전보장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면서 "생각해보라. 북미든, 북남이든 서로 싸우고 헐뜯고 하는 것이 지금 호상간에(상호간에) 무슨 이득이 있겠냐"라고 말했음.
- 신 대사는 또 '화해를 위해 준비 하는게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아 항상 화해하고 대화하자는 입장 아니었느냐"면서 "지금은 대화의 시대"라고 밝혔다.
- 그는 미국이나 남측 인사를 북으로 초청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리 구체적인 것은 더 지나봐야 알지 않겠는가"면서 "어쨌든 북조선은 계속 대화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대표단은 이날 뉴욕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이 베이징에 며칠 머물 것이냐는 질문에 신 대사는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음. 북한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이번 대화 결과에 대해 중국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 대표단이 이번 방문일정을 힘들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신 대사는 "비행시간이 북경에서 뉴욕까지 12시간이다. 또 시차도 열두시간이 난다. 밤과 낮이 완전히 바뀌지 않나. 육체적으로 힘든 거야 말할 필요도 없지 뭐.."이라고 답했음.
- 지난달 26일 뉴욕에 도착한 북한 대표단은 같은 달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건물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북미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 회담 후 북미 양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논의되고 어느 부분에 대해 어느 만큼 의견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건설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음.
- 김 제1부상은 특히 지난 1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등이 참석한 전미외교정책협의회 주최 토론회를 마친 뒤 숙소 앞에서 기자들이 "남북 대화를 할 것이냐"고 묻자,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대화를 계속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전제 조건 없이 마주 앉자"고 덧붙였다.



● 김계관·장즈권 회동..북미대화 설명(8/4)

-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3일 밤 베이징(北京) 외교부 청사를 찾아 장즈권(張志軍) 외교부 상무 부부장을 만났음. 외교부는 4일 홈페이지에 김계관·장즈권 회동 사실을 밝히고 악수하는 장면을 공개했음.
- 김 부상과 장 부부장은 회동에서 "양국 관계와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음.
- 김 부상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 일행은 3일 오후 6시 40분(한국시각 7시 40분)께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이동했으며, 김 부상은 같은 날 오후 9시 즈음에 대사관을 출발해 외교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 부상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장 부부장을 찾아 지난달 28~29일 '뉴욕 북미대화'를 디브리핑(사후설명)한 것으로 추정됨.
- 앞서 김 부상은 '뉴욕 북미대화'에 대해 "매우 건설적이었고 실무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 회담의 문을 열어놓았음.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쌍방은 북미 관계를 개선하며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각 측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했으며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일단 김 부상이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장 부부장과 회동을 통해 북미대화 내용을 전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 중 양국이 향후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북 중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조만간 만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음.
- 북한은 이미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해 동시행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도 지난 2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 이익에 부합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김계관·우다웨이 만찬 회동(8/4)

-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4일 만찬을 함께 했음. 김 부상은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각 7시)께 차량을 타고 북한 대사관을 나와 인근에 있는 세인트레지스 호텔에 도착했음.
- 김 부상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호텔 안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음. 이날 만찬에는 김 부상 외에도 리근 미국국장과 최선희 부국장도 참석했음. 김 부상이 도착하기 조금 전에는 이날 만찬 행사를 주최한 우 특별대표가 호텔에 도착했다. 우 특별대표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음.
- 김 부상은 베이징에 도착한 3일 저녁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장즈권(張志



- 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만나 뉴욕 북미 접촉 결과를 설명한 데 이어 이날 낮 우 특별대표와 별도의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외무성의 수석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6자회담 대표직을 리용호 부상에게 물려준 김 부상은 현재 우 특별대표보다 형식적으로 높은 직급임. 하지만 두 사람이 오랫동안 북·중의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함께 지낸 인연으로 이날 만찬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음.
 - 베이징에 머무는 이들 동안 중국 측 외교 당국자들을 만난 김 부상은 5일 오후 중국 국제항공편 또는 6일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됨.

● <北김계관, 왜 귀국 미루고 베이징 머물까>(8/4)

- '뉴욕 북미대화' 후 베이징(北京)을 거쳐 귀국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베이징 체류가 길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 김 부상은 하루가 지난 4일 오후 고려항공편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뭔가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짐.
- 이 때문에 지난 2009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한 방문 이후 17개월 만에 이뤄진 북미대화라는 '대사(大事)'를 치른 김 부상이 관련 내용을 상층부에 보고하기 위해 서둘러 귀국하지 않고 베이징에 체류하는 데에는 그보다 시급한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됨.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우선 김 부상이 도착 당일 다소 늦은 시간인 오후 9시(한국시각 오후 10시) 즈음 외교부 청사를 찾아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 부부장을 만나고 둘째 날에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진 데 주목하고 있음. 장 부부장과 우다웨이 특별대표 모두 중국 측 6자회담 라인이라는 점에서 김 부상의 베이징 체류는 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
- 장 부부장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 바로 아래 직급이고,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현직 6자회담 수석대표임. 외교가는 김 부상이 직급상 카운터파트인 장 부부장과 면담에서 지난달 28~29일 '뉴욕 북미대화'를 디브리핑(사후설명)하고, 우다웨이 특별대표에게 향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사실 김 부상의 뉴욕 북미대화 디브리핑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북중 양국 모두 6자회담 조기 재개를 희망하면서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온도차'가 감지된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임.
- 특히 북한이 1일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해 동시행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서두른' 기색을 보인데 대해 중국이 2일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 이익에 부합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다소 '김빠진'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음.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김 부상이 귀국을 미루면서 중국 측 6자회담 라



인을 접촉하는 것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음. 이 소식통은 "북한은 북미대화가 '매우 건설적이고 실무적이었다'면서 추가적인 북미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로 내달리려 하지만 중국은 그와 관련해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는 듯 한 분위기고, 북한은 그런 중국을 설득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관측 된다"고 덧붙였다.

- 실제 뉴욕 북미회담 직후 김계관 부상은 "앞으로 계속 논의 하겠다"며 추가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반면 미국 측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적어도 급하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보이는 등 분위기가 달랐다.
- 이 때문인지 중국은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간 남북비핵화 회담에 이어 '뉴욕 북미대화' 개최라는 2단계 절차 개시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재개라는 최종 3단계 진입은 아직 요원하다는 인식을 비치고 있음.
-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이 지난달 31일 '국제관찰'이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 기사에서 뉴욕 북미대화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아직 '시일을 필요로 한다(需時日)'"고 보도한데서도 중국 정부의 분위기가 감지됨. 북한 핵문제의 복잡성에 비춰볼 때 정말로 6자회담이 재개되기까지는 중국어로 비교적 긴 기간을 의미하는 '시일'이 지나야 한다는 인식을 비친 셈임.
- 이런 상황에서도 '탐색적인' 뉴욕 북미회담을 마친 북한은 이제는 6자회담 재개의 조건과 해당 당사국의 이행과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방안,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가적인 북미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임. 물론 여기에는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북한은 미중 관계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중국이 자국을 측면 지원해주길 바라는 듯한.
- 귀국을 미룬 김 부상이 중국 측 6자회담 라인을 접촉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임.

● 천영우 靑수석, 美보즈워스와 회동할 듯(8/7)

-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이번 주 중 미국을 방문해 북미 대화에 직접 참여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7일 "천 수석이 이번 주 중 워싱턴을 방문해 미 정부의 고위인사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라면서 "보즈워스 대표가 현재 휴가 중이기는 하지만 천 수석과의 면담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천 수석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미국의 대외안보정책을 총괄하는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함.
- 천 수석은 방미 기간 도널런 보좌관과 면담하고 뉴욕 북미대화 이후 후



속 대화의 향방과 6자회담 재개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빌 번즈 미 국무부 부장관, 미첼 플루노이 국방차관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나. 미·북 관계

● 北 "동아시아 안정 위해 북미 관계 개선 필요"(8/2)

- 북미 고위급 대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일(현지시각)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미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필요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 제1부상은 이날 뉴욕에서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등 민간단체 주최로 열린 한반도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나서 숙소인 밀레니엄 호텔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토론회에서 북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김 제1부상은 북한의 우리나라농축프로그램(UEP)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토론회에서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제1부상을 비롯해 미국의 전직 외교관, 북한 관련 학자 등이 참석했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 전미외교정책협의회는 토론회 이후 개최한 기자 회견에서 "북미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미국 측 전문가들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측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 대화에 대해 "양측이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건설적이었다"면서 "(이번 대화를) 신뢰를 쌓기 위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전문가들은 또 토론회에서 핵, 남북 대화, 식량 지원, 인권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얘기했지만, 각 사안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전했다. 이들은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잃어 버렸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서 북한이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권력 승계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美의원, 농세법에 '대북식량지원금지' 명시 촉구(8/3)

-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은 2일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2012회계연도 최종 농업세출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로이스 의원은 이날 잭 킹스틴 하원 세출위 농업소위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상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농업세출법안 최종안에 대북식량지원 금지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 로이스 의원은 서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값비싼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도 잔악한 김정일 정권을 확실히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은 우리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원 되는 식량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하원을 통과한 대북식량지원금지가 포함된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최종 법안 조율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상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北, 美서 새 금강산 사업자 선정(8/4)

- 북한이 미국에서 새 금강산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음. 미국 뉴욕의 한국계 무역회사인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는 북측과 금강산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지난달 25일 체결했다고 3일 밝혔음.
- 양해각서는 이 회사가 미주지역에서 금강산 관광 선전과 투자유치, 관광객 모집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 금강산을 복합형 관광휴양지로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
- 이 회사 박일우 대표는 "금강산 관광개발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사안으로 지난주 평양지사의 직원이 내 지시를 받아 북한 정부 측과 MOU를 체결했다"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북한을 직접 방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다듬을 생각"이라고 말했음. 그는 또 "일본과 중국 등의 사업자도 곧 구체화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음.
- 박 대표가 지금 미국에서 하는 사업은 북한의 평양소주를 수입, 판매하는 것이지만 수요가 감소해 사업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사업 자금과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에서는 사업 아이디어가 좋으면 자금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면서 "물론 일정 부분 자기자본도 필요하지만 사업계획이 훌륭하면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음.
- 그는 "금강산 사업도 잘 들여다보면 그리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직영으로 해도 거대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하려는 것도 프로모션과 가이드, 어드바이스 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북한 정부와 현대아산 간의 독점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내가 논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음.

● 美 "北 수해상황 주시 중..긴급지원 지지"(8/6)

- 미국은 5일 북한에서 최근 발생한 수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하에서의 북한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북한의 수해 발생과 관련된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의 최근 수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지금로서는 어떤 추가적인 지원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무



- 부는 이어 "미국은 국제적 모니터링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지지 한다"면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은 어떤 정치적, 안보적 이슈와는 관련돼 있지 않다"고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했음.
- 이런 입장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수해지원 요청이 들어올 경우 철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일정한 정도의 의료, 생필품 등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 발표로 해석됨.
 - 국무부의 자료 배포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수해와 관련된 미국의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임. 미국은 수해 발생 전부터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검토해 오고 있는 상황임.

● "北-美적십자, 이산가족 서한교환 합의"(8/6)

- 지난 5월 북한과 미국 간에 재미 이산가족 10가족의 서한을 시범적으로 교환하자는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6일 "미국 적십자사 고위관계자와 유엔주재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접촉해 적십자사 간에 통용되는 '레드크로스 메시지' 방식을 통해 시범적으로 이산가족 간 서한 교환을 추진하고 이후에 상봉을 논의해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음.
- '레드크로스 메시지'는 한쪽에서 이산가족의 신상명세와 메시지를 작성해 전달하면 상대국가에서 가족을 찾아 이 메시지를 전달한 뒤 답장을 받아 다시 보내주는 방식임.
-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상봉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로 이 합의가 실행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근 북미대화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외무성이 관련돼 있어 관련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음.
- 최근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뉴욕을 방문해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만나는 등 북미간의 대화가 이어지는 분위기임.
-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북미적십자사 간 합의가 있었다면 북미 대화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 관련 대화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듣은 얘기가 없다"고 말했음.

다. 중·북 관계

● 北 라선시 대표단, 中선양 방문(8/1)

- 림경만 북한 라선시 책임비서 일행이 지난달 31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를 방문, 쩡웨이(曾維) 당서기 등 선양시 간부들과 만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심양일보(瀋陽日報)가 1일 보도했음. 이날 면담에는 리기범 주선양 북한총영사와 마잔춘(馬占春) 선양시 비서장 등이 배석했음.
- 쩡 서기는 이 자리에서 "선양은 이미 북한의 여러 도시와 우호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앞으로 라선시와의 경제협력과 우의도 강화, 중조(中朝)



-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 림 비서는 "최근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선양시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선양의 도시개발 경험을 배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림 비서를 비롯한 라선시 방문단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창춘(長春)에서 지린(吉林)성과 라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 계획의 기본 틀인 '중조 라선경제무역구(2011-2020년) 계획 기본 협의'를 맺고 쑤정차이(孫政才) 서기를 비롯한 지린성 간부들과 경협 방안을 논의했음.
 - 북한과 중국은 지난달 8일과 9일 황금평·위화도와 라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 착공식을 하고 이를 위한 협정도 맺었음. 이후 공동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이 도출되는 등 북·중의 라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이 속도를 내는 반면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은 착공식 이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임.
 - 이 때문에 지린성이 라선 개발에 의욕적인 것과 달리 랴오닝성은 황금평 개발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림 비서의 이번 선양 방문은 이 지역 기업들의 라선 투자 유치를 끌어내는 한편 라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의 진척 상황을 설명하고 랴오닝성이 황금평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했음.

● 림경만 北라선 책임비서, 中다론헬향 시찰(8/3)

-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 중인 림경만 북한 라선특별시 책임비서가 다론펬(大連)을 방문, 항만 등을 시찰했다고 현지 언론인 신상보(新商報)가 3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림 비서 일행은 지난 2일 탕진(唐津) 다론펬시 서기와 만나 양측 간 경제 협력과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음.
- 림 비서 일행은 탕 서기 면담에 앞서 다론펬 경제기술개발구를 방문해 항만 건설과 운영, 도시 녹화 사업 등을 둘러봤음. 탕 서기는 림 비서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다론펬 방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라선과의 경제 협력과 교류 증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음.
- 림 비서도 "라선과 다론펬은 지리적인 환경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며 "개발구 건설과 물류, 관광 분야에서 양측이 합작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 답했음.
- 림 비서의 이번 다론펬 방문은 북한이 라진항 개발 모델로 삼으려는 다론펬 3호 부두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했음.
- 다론펬향은 지난해 5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행선지로, 당시 김 위원장은 특별열차로 단둥(丹東)에 도착하자마자 승용차로 같이타고 다론펬를 찾아 다론펬개발구에 건설 중인 3호 부두를 1시간여 시찰했음.
- 40만㎡ 규모로 계획된 이 부두는 컨테이너 적재와 보세물류, 자동차 선적 등을 하는 화물 전용 부두로, 김 위원장이 라진항 개발의 모델로 삼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음.



- 북한은 2008년 다렌의 창리(創立)그룹에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준 데 이어 2009년 11월에는 지린(吉林)성과 라진항을 중계무역과 보세, 수출가공이 가능한 국제 물류기지로 합작 개발키로 합의했음.
- 당시 지린성 발전연구센터 류시밍(劉庶明) 거시경제처장은 현지 언론에 "이미 세계화상(華僑)연합회와 미국의 한 기업이 라진항 개발에 30억 위안(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다렌 3호 부두가 컨테이너와 보세물류 전용 부두라는 점에서 라진항을 물류기지로 개발하려는 북한이 벤치마킹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임.
- 립 비서를 대표로 하는 라선시 대표단은 다렌 방문에 앞서 지난달 29일 창춘(長春)에서 지린성과 라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 계획의 기본 틀인 '중조 라선경제무역구(2011-2020년) 계획 기본 협의'를 맺고 쑨정차이(孫政才) 서기 등 지린성 간부들과 경협 방안을 논의했음.
- 이어 같은 달 30일과 31일 각각 사더린(夏德仁) 랴오닝(遼寧)성 부서기와 쩡웨이(曾維) 선양(瀋陽)시 서기를 만나 교류와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음. 이 자리에서 립 비서가 황금평 개발에 랴오닝성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中, 北 칠보산까지 자동차관광 추진(8/4)

- 중국이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출발, 훈춘(琿春)을 거쳐 북한 라선을 다녀오는 자동차관광 코스를 개통한 데 이어 온성과 칠보산을 둘러보는 자동차관광 코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음.
- 통신은 훈춘시 여유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훈춘에서 함경북도 온성, 칠보산을 다녀오는 코스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2개의 자동차관광 코스 개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통신은 그러나 이들 코스의 자동차관광이 언제 개통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이에 앞서 중국과 북한은 창춘에서 훈춘 관하(圈河)통상구를 거쳐 라선을 자동차로 다녀오는 관광코스를 신설, 라선특구 공동개발 착공식이 열린 지난 6월 9일 24대가 참가한 자동차 관광단이 처음으로 라선을 방문했음. 이들은 라진항, 또 북한이 해양관광특구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비파도 등을 관광했음.
- 신화통신은 창춘-라선 자동차관광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지린성 중신(中新)국제여행사 등 7개 여행사가 이 코스 관광상품 판매에 나섰다고 소개했음. 중국이 지난해 4월 북한을 단체관광 허용 국가로 지정한 이후 북한 관광 코스가 잇따라 신설되는 등 북·중 관광 교류가 활기를 띠고 있음.
- 지난 4월 창춘-훈춘-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북한 라선을 잇는 북·중·러 3국 무비자 관광이 시작됐고 5월에는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용정(龍井)-북한 칠보산 관광 코스가 개통됐음. 이어 지난달에는 훈춘에서



출발, 함경북도 온성을 다녀오는 관광이 20년 만에 재개됐으며 같은 달 화룡(和龍)-북한 삼지연 관광코스도 혜산과 평양까지 연장됐음.

- 함북 온성은 김일성 주석이 1933년 항일무장 투쟁을 국내로 확대 발전시킬 전략적 방침을 제시했다는 '왕재산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최북단 군(郡)임. 또 상하이-평양 직항노선도 개통돼 지난달 1일 중국의 관광단이 처음으로 이 노선을 이용해 4박5일 일정으로 평양과 묘향산, 금강산, 개성 등을 둘러봤음.

● "北관리들 마약 中밀반입에 관여"〈英스카이방송〉(8/4)

- 북한 관리들이 중국으로의 마약 밀수에 개입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영국 위성방송 스카이가 4일 보도했음. 이 방송은 취재진이 마약 매수자로 가장해 중국 북부 주택개발단지에서 '북한 국적의 마약상과 접촉했다며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음.
- 이 동영상에서 취재진의 차에 오른 마약상은 선글라스를 낀 것 외에는 크게 거리낌 없는 태도로 자신의 북한 신분증을 매수자로 가장한 기자에게 보여주고, '북한산 헤로인'에 대해 설명했음.
- 이 남자는 흰색 가루가 든 비닐봉지 3개를 꺼내 보여주며 북한에서 생산한 순수한 헤로인이라면서 2주 정도면 1kg까지는 쉽게 빼올 수 있다고 말했음. 그는 "북한 돈 400~500원을 북한 군부대에 주고 며칠에 한 번씩 국경을 드나든다"면서 '가까운 동무'인 북한 관리한테서 헤로인을 샀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방송은 북한이 마약거래에 연루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면서 지난 2003년 북한 선박 봉수호가 호주에 헤로인 50kg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사건 등을 거론했음. 그러나 방송은 이 '마약상과 접촉하게 된 경위와 그가 실제 북한 국적인지를 확인했는지 여부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이 남자의 진술 외에는 북한 관리가 마약의 출처라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음.

● 北해군사령관, 방북 中해군함대 방문(8/6)

- 북한 정명도 해군사령관과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6일 원산항에 정박 중인 중국훈련함대를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 이날 함대를 방문한 정 사령관과 박 부부장, 김명식 조선인민군 소장, 염봉진 원산시 당 책임비서, 리일섭 원산시 인민위원장 등은 뱃양(浣陽)호에 올라 무장장비와 설비들을 돌아봤음.
- 함대를 이끄는 중국 북해함대 사령관 텐중(田中) 중장과 지휘관들은 이날 평양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고 방문록에 '한평생 위대하니 대대손손 칭송하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했음.
- 중국 해군훈련함대 소속의 뱃양호와 정허(鄭和)호는 지난 4일 북한 원산항에 도착했으며 함대에는 다롄(大連) 함정학원 생도 100여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해군 훈련함대의 북한 방문은 1996년 이후 15년 만의 일로, 텐 사령



관은 4일 환영연회에서 "온갖 시련과 풍파를 이겨낸 중조(中朝) 친선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공동의 가치"라며 양국 해군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 "北, 올봄 중국에 합동 군사훈련 제안"(8/7)

- 북한이 올봄 중국에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으나 중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7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국방 당국자를 통해 올봄 중국에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타진했으며 특히 해군 훈련을 강력하게 희망했다고 전했다.
- 북한은 군사조약 성격이 강한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의 체결 50주년을 맞아 중국과의 군사훈련을 기념행사로 실시해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한국,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음. 중국 측은 북한의 이런 의도를 읽고 합동 군사훈련 제안에 대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문은 중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제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후계자로서의 업적 만들기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음.
- 신문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5월 방중 당시 중국이 개발한 신형 전투기인 '제10'과 '제11'의 공급을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 한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대화에서 북한 측이 영변 이외의 우리농 농축시설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보도했음.
-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미 대화 당시 미국 측이 핵 관련 시설 존재 여부 등 핵개발의 전모를 묻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영변 외의 핵시설은 없다고 부인했으며 '전력 생산을 위한 평화적 핵 이용'이라고 설명해 우리농 농축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음.
- 미국은 이번 대화에서 김계관의 발언을 영변 시설에 한정해 향후 비핵화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전략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신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라. 일·북 관계

● <北 '독도는 겨레의 영토'...南과 한목소리>(8/1)

-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에는 남측보다 더 격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음.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우리 겨레는 조국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일제의 과거 죄행과 함께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한낮의 개꿈'이라는 글에서 "최근 영토 팽창에 환장한 일본 반동들의 독도강탈 책동이 날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며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음.
- 또 이 매체는 지난달 31일부터 '독도는 불가분리의 조선영토'라는 시리즈물을 통해 독도 지명의 역사적 유래와 개척 역사 등을 소개하고 있음.
- 우리민족끼리는 당분간 일본 측 주장이 허황한 논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문헌과 지도, 법적 고찰 등에 관한 내용을 내보낼 것으로 보임.
- 지난달 30일에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최근 일본 반동들이 남조선 여객기의 독도 상공 시험비행을 걸고들며 일본 공무원들의 남조선 여객기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까지 강행하려 해 남조선 인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서기국 보도를 내놓기도 했음.
- 북한의 이런 대일비난은 남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우월하다는 근거를 일제시대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찾는 북한의 근현대사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분석임. 북한 입장에서 일본의 영토적 야심은 타파하고 물리쳐야 하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억압을 상기시킴.
- 또 북한이 남한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일본을 비난하는 배경이 됨.
-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노동당의 최종목적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온 사회'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이런 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북한에도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근현대사와 영토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남북관계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을 맹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마. 러·북 관계

● 北-러시아, 이달 말 장관급 경제협약(8/7)

- 북한과 러시아가 이달 말 평양에서 경제 협력을 위한 각료급 접촉을 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음.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이달 말 평양에서 한국으로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과 관련 북한과 각료급 협의를 염.
- 북한과 러시아의 각료급 경제협약은 지난 2009년 5월 계획됐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무기한 연기됐었음. 양측은 이번 각료급 협의에서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러시아 극동의 하산과 북한 나진을 연결하는 철도 완성, 전력 사업 등 3개 분야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 러시아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달 초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사의 간부가 북한을 방문해 구체적 계획에 합의했으며, 북한은 한국으로의 가스 공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표명했음.

-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경제 협력 진전의 장벽이었던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채무 90억 달러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됨.

바. 기 타

● "英대사와 함께 하는 北관광, 10월 첫출발"(8/3)

- 제임스 호어 초대 북한주재 영국대사의 가이드와 북한 관련 강의로 이뤄지는 북한 '정치관광' 일정이 10월로 확정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했다.
- 영국의 여행사 '폴리티컬 투어스'에 따르면 극작가, 학자 등 북한을 처음 방문하는 10여명이 이 상품을 예약했음. 이들은 오는 10월15일부터 열흘간 평양과 함경남도 함흥, 강원도 원산 등을 돌아봄.
- 이 여행사의 니컬러스 우드 대표는 참가자들에 대해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직접 보고 들으려 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우드 대표는 "주민들의 일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수도와 멀리 떨어진 곳을 가봐야 한다고 생각해 함흥과 원산을 계획에 넣었는데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그는 북한이 이번 관광 상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를 늘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북한에서 원산농업대학과 공장 방문 등의 일정을 이끌 호어 전 대사는 "이번 관광이 관광객과 북한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음.
- 참가자들은 북한에 들어가기 전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 등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 사회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음.

● 국제적십자, 北수해복구에 58만 달러 긴급지원(8/3)

- 국제적십자사(IFRC)가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58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외신이 3일 보도했음.
- 외신들은 "IFRC가 북한 수해복구를 위한 재난 긴급구호 기금으로 58만 2천194달러(약 6억1천6백만 원)를 배당했다는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IFRC는 특별예산으로 수재민에게 식량 이외의 구호품을 제공하고 수해지역 현장실사, 수재민 파악 및 등록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황해도와 함경남도 내 10개 군에서 2012년 2월까지 6개월간 복구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프랜시스 매커스 IFRC 대변인은 "기금 집행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해당 구호물품 분배를 시작했다"며 "인도주의 상황이 급박해 예산 결정을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 IFRC는 지난해 여름 신의주에서 수재민 1만6천명이 발생하자 재난구호 긴급기금에서 약 37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음.

● **北-캄보디아, 교류·협력 협정문 체결(8/5)**

- 캄보디아가 최근 리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과 보리트 캄보디아 외무차관이 맺은 '경제무역 협력 강화'에 대한 협정문을 공개했다고 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 이번 협정문에는 '북한과 캄보디아가 경제, 무역, 지식정보, 해양교통, 투자, 외교, 문화 등 7개 분야에서 두 나라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과 양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음.
- 특별공동위원회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양과 캄보디아 프놈펜 두 도시를 오가며 공식협의회를 열게 되며 2013년에는 평양에서 제2차 특별공동위원회 협의회가 열림.

● **〈北, 논란 속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데뷔〉(8/5)**

- 북한이 논란 속에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의장국으로 데뷔했음. 서세평 주(駐)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4일(현지시각)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군축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음.
- 이날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참석했으나 북한이 순회의장국을 맡은 것에 항의해 이 기간 군축회의에 잠정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캐나다는 불참했음.
- 힐렐 노이어 '유엔워치'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무법자인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무기통제에 관한 회의를 주재토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음. 그는 또 "북한은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자국 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무자비한 정권"이라며 "북한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국제기구를 선전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인민군 대위 출신의 탈북자 김주일씨는 지난 2일 유엔워치를 비롯한 25개 민간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군축회의 순회의장국 활동을 체제선전에 활용할 것이다. 이는 북한 주민의 노예회를 영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익명을 요구한 제네바의 한 외교관은 "군축회의 의장은 대체로 회의 진행과 관련한 역할을 맡을 뿐 자신의 위치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체제 선전에 이를 활용하면 경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인 리장곤 공사는 회의에서 "북한은 전 세계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늘 지지해 왔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회원국들에 군축회의의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호소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상원 지도부, 한미FTA 추진계획 '합의'(8/4)

- 미국 의회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3일 한국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다음 달 처리 방침에 사실상 합의했음.
- 미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킨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리드 대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의회 휴회 직후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추진계획(path forward)'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 성명은 최근 몇주일간 두 대표의 보좌진이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추진계획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 리드 대표는 "나는 FTA를 지지한 적이 없고 (지금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TAA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라는 전제를 달아 TAA 연장안 처리를 조건으로 FTA 이행법안 처리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 매킨 대표는 "나는 TAA를 지지하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혀 더이상 TAA 연장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음.
- 양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이처럼 추진계획에 대한 합의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다음달 가을 회기가 시작된 직후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
-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상원에서 추진계획이 합의된 것은 큰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라고 평가한 뒤 "무역협정 기준을 더이상 지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하원도 조속히 이행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 론 커크 대표도 성명을 내고 "리드, 매킨 원내대표가 FTA와 TAA 문제에 대한 추진계획에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음.
- 커크 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했듯 한국 등과의 FTA는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면서 "행정부는 9월 이행법안 처리를 위해 의회 상·하원 지도자들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미, UFG연습때 WMD제거 합동기동부대 편성"(8/7)

- 한국과 미국은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합동기동부대(JTF-E)를 편성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실전 연습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한미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는 UFG 연습 때 합동기동부대를 편성해 도상(가상) 연습과 실전연습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지는 가상연습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의 WMD를 숨긴 장소를 찾아내어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이를 폐기, 파괴, 해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또 양국군으로 편성된 합동기동부대는 WMD가 은닉됐다고 가정한 특정지역으로 실제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켜 탐지, 폐기, 파괴, 해체하는 한편 WMD를 특정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실전연습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 JTF-E는 미 육군 제20지원사령부가 주축이 되어 편성되며, 우리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는 JTF-E에 통합되어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음. 이 부대는 WMD 정보융합실과 기술개척반, 제거작전계획반, WMD 평가반 등으로 구성됨.
- 지난 2004년 10월 창설된 제20지원사령부는 미국 내는 물론 이라크 등 세계 전장 일선에 파견돼 WMD 탐지,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임. 작년에 처음으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연합으로 WMD 제거 연습을 했으며 올해는 350여명 규모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통은 "JTF-E는 유사시 북한에서 WMD 시설로 의심되는 지역을 확보하고 이를 4단계 절차에 따라 파괴,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우리 군도 JTF-E에 통합되어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WMD 제거 임무와 관련해 오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미국은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자신들이 WMD 제거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음.
- 군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미 제20지원사령부가 한반도로 늦게 전개되거나 어떤 예상치 못한 이유로 전개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 군 내부적으로 여단급 규모의 WMD 제거 전담 작전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한·일 관계

● 한·일 '울릉도 방문' 외교충돌..관계 급속냉각(8/1)

-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위한 한국행 강행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외교마찰이 본격화되고 있음. 일본은 특히 2일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어서 양국 관계의 급속한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일본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중의원 의원과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 등 3명은 1일 오전 8시55분 하네다발 김포공항행 전일본공수(ANA) 비행기편으로 출국했음. 이들 의원은 오전 11시2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임.
- 신도 의원은 출국 전 하네다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입국금지 효과는 우



- 리가 (한국에) 가서 입국을 시도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가기도 전에 겁을 먹거나 한국에 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일본 측에 통보한 대로 이들 의원이 김포공항에 도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11조를 적용해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불허할 방침임.
-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정해진 입장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정부로서는 이미 이들 의원의 신변안전 보장이 어렵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은 공항 입국장에서 1시간여 체류한 뒤 일본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실행될 경우 일본 정부는 외교통상부 장관상 동북아국장이나 신각수 주일대사를 통해 항의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2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예정임. 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 2005년 이후 독도 관련 기술을 그대로 답습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 등을 불러 엄중한 항의입장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도 전달할 예정임.
 - 정부는 이와 함께 고위급 인사의 독도방문과 국회 독도특위 12일 개최, 독도시설물 공사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의 고강도 대응방안을 본격 검토할 방침임.
 -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을 계기로 고위급 인사교류와 동북아 정치·안보협안 협력, 한·중·일 협력사업,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방면에 걸쳐 한일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 보임.
- **日 의원일행 입국시도 9시간 만에 귀국(8/1)**
-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려던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입국 시도 9시간 만인 1일 오후 8시10분 출국했음.
 -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법무부 당국자의 입국 금지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다 귀국하지 않을 경우 일반 불법체류자와 함께 송환대기실에 수용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받고서야 일본행 항공기에 올랐음.
 - 중의원의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참의원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 등 3명은 이날 도착 직후 입국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입국심사대에 도착하기 전 송환대기실로 안내해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 방침을 설명했다.
 - 그러나 이들은 입국 불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법무부가 임시로 마련한 대기실에 머물며 출국을 거부했음.
 - 신도 의원은 "우리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한국의 안전을



- 위험하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방한 목적을 들어나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 우리 정부는 당초 일 의원들이 타고 온 전일본공수(ANA) 항공편으로 이들을 낮 12시40분 곧바로 되돌려보 낼 방침이었음. 그러나 이들이 출국을 거부한 채 버티자 주한 일본대사와 함께 최대한 빨리 떠나도록 설득 작업을 벌였음.
 - 정부는 오후 8시10분 마지막 비행기편 출발을 앞둔 오후 7시께 이날 중 돌아가지 않으면 일반 불법체류자와 함께 송환대기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했음.
 - 일 의원들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바꿔 이날 귀국하기로 결정했음.
 - 신도 의원은 이에 앞서 비행기에서 내린 뒤 "독도는 일본 영토다. 그래도 양국 간 의견 차이가 있으니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율적으로 통행이 확보된 일본 대표의 입국이 금지되면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나타낸 뒤 "입국이 거부되면 다시 방한하겠다"고 말했음.
 - 독도 영유권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의도 아래 울릉도 방문을 예고했던 이들은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 방침에도 이날 오전 8시55분 하네다발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했음.
 - 신도 의원은 지방공무원 출신의 4선 중의원으로 울릉도 방문을 주도한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의 위원장 대리를 맡는 등 자민당 내에서 보수 강경파에 속하는 인물임. 신도 의원과 함께 입국을 시도한 두 의원도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우익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들이 한국 정부의 사전 입국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입국을 시도하면서 한일 외교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이에 앞서 이들의 울릉도행 계획에 깊숙이 관여했던 일본 다쿠쇼쿠(拓殖)대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교수는 지난 31일 오후 9시30분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다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돼 1일 오전 1시40분 일본으로 되돌아갔음.
 - 신도 의원은 출국장에서 "다시 방한하겠다.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음.

● 日정부·정치권, 의원 韓 입국 불허에 반발(8/1)

-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 정부가 자민당 우익 의원 3명의 입국을 불허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음.
-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1일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 등 울릉도를 방문하려던 자민당 우익 의원 3명의 김포공항 입국이 거부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하려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대해 (한국이 입국 금지로 대응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마쓰모토 외무상은 이날 오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 등 자민당 의원 3명의 입국을 한국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음. 그는 또 이재오 특임장관의 독도 방문에도 유감을 표시하고, 12일 예정된 독도에서의 국회 독도특위 개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
- 지난달 29일 우리 정부가 양국 외교에의 부정적 영향과 의원들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며 입국 불허를 일본 정부에 사전 공식 통보했음에도 마치 이를 알지 못했다는 투입.
- 자민당의 아이자와 이치로(逢澤一郎) 국회대책위원장은 "국민의 선량인 국회의원의 입국이 거부된 것은 이례적이다"면서 "일한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외교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음.
- 자민당 지도부는 그동안 겉으로는 소속 우익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말리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속으로는 이들의 한국 방문을 허용했음.
-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우익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할 경우 예상되는 외교관계의 악화와 안전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이들의 한국행을 저지하지 않았음. 한통속이 돼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려는 노림수가 있었던 것임.
-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島根)현 영토라고 주장하는 미조구치 겐베(溝口善兵衛) 지사는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일한의 주장에 큰 격차가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 냉정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음.

● <日학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주장 인정 안 해>(8/2)

- 일본 자민당 의원들에 앞서 일본의 한 우익 성향 교수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겠다고 울릉도에 가려다가 입국 거부됐지만 일본 학계의 연구 동향은 사뭇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왔고, 입국이 거부된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拓殖)대 교수는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의 대표로 있으면서 이같은 억지 주장에 앞장서온 학자임. 일본 언론이 즐겨 인용하는 이른바 '다케시마 전문가'이기도 함.
- 하지만 이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일본 학자들은 시모조 교수와 달리 미디어에 등장하기를 꺼리긴 해도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남겨놓았음.
- 대표적인 것이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토대 교수가 1987년에 공개한 '1877년 태정관 지령' 문서의 존재임. 태정관(太政官)은 일본 연호상 메이지(明治) 원년(1868년)부터 메이지 18년(1885년)까지 있었던 국정 최고 기관으로 현재 일본 내각의 전신임. 문서에 따르면 1877년 당시 태정관은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外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시했음.
- 이에 대해 "외일도(外一島)는 독도가 아니다"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이후 태정관 지령에 첨부된 약도까지 공개되면서 외일도가 독도이고, 일



본 정부는 1877년까지만 해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점이 명백해졌음.

- 제일 독도 연구가인 박병섭씨의 책 '독도=다케시마 논쟁'에 따르면 '다케시마의 날'을 만든 시마네현조차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올려놓지 않은 데에는 이런 배경도 작용했음.
- 최근에는 '일본 고유 영토론' 외에 '일본 내각이 시마네현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요청에 따라 1905년 주인이 없는 땅인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다'는 이른바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에서 독도 문제를 연구해온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나고야대 교수는 최근 일본 역사전문 잡지 '역사평론'에 발표한 '다케시마/독도 논쟁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무주지 선점론에 대한 논의 동향을 자세하게 소개했음.
- 이케우치 교수는 이 글에서 나카이가 사실은 대한제국 정부에 먼저 "독도 부근 강치잡이를 독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했고, 일본 내각은 애초 독도 편입에 난색을 보였고, 시마네현 사람들이 1906년에 울릉도에 가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고 전하자 대한제국 관리들이 "울릉군에 속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고 소개했음. 이케우치 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대한제국 관리들의 발언에는 뭔가 (법적) 근거가 있을 텐데 공식문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연구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음.

● 日 이번엔 방위백서로 '도발'..한일 독도갈등 확산(8/2)

-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1일 울릉도 방문을 시도한데 이어 일본 정부가 2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하고 나서 양국 간 외교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임.
-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의결했음. 일본 방위백서는 제1부 '우리 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했음.
-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뒤 이 기술을 7년째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 방위성은 또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음.
- 이는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 4개 섬을 지도상에는 영토로 표시하면서도 자국 명칭을 달지 않은 것과 대조됨.
- 이번 방위백서는 제작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두 번째로 나온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엄중한 항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음. 정부는 또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이번 방위백서 발표에 항의하는 논평을 낼 계획임.
 - 이는 당국자 논평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 참사관을 초치했던 예년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수위의 대응으로 평가됨. 정부는 이와 함께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과 시설물 공사 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의 실질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는 1일 오후 총리실 주재로 합동 태스크포스인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을 열어 최근 일본 측의 독도관련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음.
 - 정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한일 양국관계에 도움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음.
 - 한편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독도를 방문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해 이를 둘러싸고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가일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 **日 자민 의원들 "9월에 울릉도 가겠다"(8/3)**
-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행 시도가 일본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아 여야 보수 성향 의원들이 덩달아 들쭉이기 시작했음. 이 문제로 자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간에 갈등이 불거질 조짐도 나타났음.
 -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자민당 의원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9월에 울릉도에 가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3일 확인됐음.
 - 히라사와 의원은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등 자민당 의원 3명과 함께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겠다고 울릉도행을 계획했던 의원임. 히라사와 의원은 한국행 직전에 다른 정치 일정을 이유로 내세워 방문단에서 빠졌지만 최근 자신의 웹사이트에 "나는 울릉도행을 그만둔 게 아니라 1개월 정도 연기한 것"이라고 적어놓았음.
 - 일본 민영방송인 후지TV와 TBS도 2일 히라사와 의원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의원이 일본의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9월에 울릉도에 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음. 한국 입국이 좌절된 신도 의원 등 3명도 지난 1일 밤 귀국 회견에서 "다시 계획을 짜서 한국행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울릉도에 가겠다는 자민당 의원들은 더 늘어날 수 있음.
 - 자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의 보수 성향 의원들까지 힘을 보탬 조짐도 나타났음.
 - 여야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고자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2일 한국 정부에 "신도 의원 등의 입국을 거부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의원연맹 회장인 아마타니(山谷) 에리코 자민당 의원은 "당연한 정치활동을 테러리스트나 마찬가지로 이유로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본 전체가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3일자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이 의원연맹에는 신도, 히라사와 등 자민당 의원 외에 히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전 총무상과 마쓰바라 진(松原仁) 등 민주당 보수 성향 의원들이 속해 있음.
- 이 사안은 온건 보수 성향의 자민당 지도부와 강경 소장파 의원 간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음.
-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당 간사장이 2일 회견에서 "당은 의원들을 (한국에)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한국과의 사이에) 영토 문제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일로 모든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신도 의원 등을 비판한 반면, 니시다 쇼지(西田昌司) 참의원 의원은 "집행부의 대응은 뒤죽박죽이다. 영토문제를 다루려면 자세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 日요코하마시 '역사왜곡' 중학교 교과서 채택(8/4)

- 내년부터 4년간 일본 요코하마(横浜)시의 중학생 약 10만 명이 배울 역사교과서로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고 묘사한 책이 선택됐음.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4일 공개 정례회의를 열고 교육위원 6명의 기명투표를 거쳐 시립 140여개 중학교, 학생 약 10만 명이 사용할 역사·공민교과서로 일본교육재생기구가 만든 이쿠호샤(育鵬社)판을 채택했음. 사용 기간은 2012~2015년 4년간임.
- 교육위원 투표에서 4명은 역사와 공민 과목 모두 이쿠호샤, 나머지 2명은 다른 출판사 책을 골랐음. 교육위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학생들이 일본의 문화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이 전했다.
- 이쿠호샤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책을 펴냈던 후소샤(扶桑社)의 자회사임. 새역모가 후소샤와 법정 분쟁 끝에 자유샤(自由社)와 손을 잡자, 이쿠호샤는 새역모에서 갈려나온 일본교육재생기구는 단체의 교과서를 폐내기 시작했음. 올해 3월30일에 검정을 통과한 이쿠호샤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한 것은 물론이고,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고 표현했음.
- 요코하마 교과서 채택 연락회 등 지역 단체는 시민 약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이쿠호샤 등의 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음. 시민단체는 이날 결정에 대해 "전쟁을 정당화하는 교과서를 수많은 학교 현장에 강요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일본의 이른바 '왜곡교과서' 채택률은 2001년 0.039%, 2005년 0.4%, 2009년 11월 1.7%로 꾸준히 높아졌고, 올해는 요코하마시의 결정에 따라 최소 2~3%를 넘게 됐다. 일부에선 채택률이 5~10%로 높아질 것



으로 보고 있음. 이쿠호샤 교과서는 요코하마시 외에도 도치기현 오타와라(大田原)시, 도쿄도립 중·고 일관교, 가나가와(神奈川)현 후지사 와(藤澤)시 등에서 채택됐음.

● '영토주권의 상징' 독도 주민숙소 준공(8/4)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도가 영토 주권의 상징으로 독도 서도(西島)에 있는 주민 숙소를 확장해 준공함. 도는 오는 5일 김관용 도지사와 최경환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국기 게양식과 주민 숙소 준공식을 잇달아 열.
- 주민 숙소는 독도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위급할 때 피신처로 이용하고 김성도씨 부부 등 주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쓰임. 이를 위해 도는 2009년부터 30억 원을 들여 2층에 연면적 118.9㎡인 어민 숙소를 4층에 373.14㎡로 증개축 했음.
- 건물 1층과 2층에는 창고와 발전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가 들어서고 3층에는 김씨 부부 주거공간과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했음. 꼭대기인 4층엔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했음. 주민 숙소 옥상에는 아트타일로 태극기와 독도 경관이 그려져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방문객과 지나가는 배 탑승객 등에 널리 알리게 됨.
- 김관용 도지사는 "독도 주민 숙소는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독도방파제와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 관련 사업을 완료해 영토주권 수호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고 말했음.

● 日, 韓여객선 일본인 승선거부 반발(8/5)

- 일본 정부가 강원도 강릉과 울릉도·독도를 연결하는 민간 여객선의 일본인 승선 거부에 불만을 표출했음. 5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의 다카하시 지아키(高橋千秋) 부대신(차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우호국인 우리나라 국민만을 대상으로 (여객선의) 이용제한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사실이라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음.
- 이 신문은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국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치안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다. 한국 측이 안전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강원 강릉~울릉도·독도를 정기운행하는 여객선을 운영 중인 '씨스포벨'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 영유권 문제로 울릉도 방문을 시도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일본인의 여객선 승선을 무기한 거부하기로 했음.



다. 한·러 관계

● 〈한·러 대학생 대화' 페테르부르크서 개최〉(8/1)

- 한국과 러시아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한·러 대학생 대화'가 2~9일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림.
- '한·러 대학생 대화는 2008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해 출범시킨 양국 민관산학 협의체인 '한·러 대화(KRD)'의 6개 분과 가운데 '차세대 분과'가 주도하는 주요 프로그램임.
- 다음 세대를 이끌 대학생들 간의 교류와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의 깊이와 외연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져 지난해 7월 서울과 제주에서 1차 대화를 개최한 바 있음.
- 1일 행사를 주관하는 고려대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2차 대화에는 한국 측에서 20명, 러시아 측에서 22명 등 모두 42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함.
- 한국에서는 고려대·서울대·연세대·한양대·국민대·한신대·인천대·인하대·울산과학기술대·조선대 등의 학생들이 선발됐으며, 러시아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노보시비르스크국립대·우랄연방대·러시아민족우호대·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MGIMO)·블라디보스톡국립경제대·노보시비르스크국립기술대 등의 학생들이 뽑혔음.
- 참가 학생들의 전공 분야도 동양학, 국제관계학, 원자력학, 수학, 국제경영학, 행정학, 지역학, 정치학, 법학, 사회학 등 다양함.
- 대화 기간에 학생들은 우선 러시아와 한국 청년문화의 주요 경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임.
- 또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역할', '일상의 환경-우리 주변의 제도들', '공존의 문제-정치, 경제, 자원'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게 됨. 학생들은 분과별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리해 대화 결과를 담은 합의문을 작성하게 됨.
- 대화 개최식에는 니콜라이 크로파체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총장, 굴나라 크라스노바 러시아민족우호대 부총장, 이연수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 총영사 등이 참석할 예정임.

● 김외교 6일 첫 러시아 방문..북핵 등 논의(8/2)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는 6일부터 3박4일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음. 김 장관은 오는 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와 한반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 김 장관은 러시아 정부와 의회, 언론계의 주요 인사들과도 면담하고 한



- 반도·국제 문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도 열 계획임. 김 장관은 특히 남북 비핵화 회담과 북미대화 이후의 정세 운용에 대해 러시아 측과 의견을 조율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기여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 당국자는 "김 장관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그중에는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떤 조치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취임 후 처음임. 김 장관은 이번 방문으로 4강 방문 외교를 마무리하게 됨.

라. 미·중 관계

● 中 관영언론, 美 부채협상 '문제은행' 비난(8/2)

- 중국 관영 언론들이 극적으로 타결된 미국 연방정부 부채협상에 대해 "전 세계를 상대로 위험요소와 문제점을 은폐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맹 비난하고 나섰다.
-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일자 사설에서 "미국이 디폴트(채무 상환 불이행)를 모면했지만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면서 이같이 비판했음.
- 신문은 "이 문제는 뒤로 미뤄졌을 뿐이며 부채는 계속 늘어나게 마련"이라면서 "이는 미국 경제 회복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전 세계 경제에 더 큰 위험요소와 문제점을 은폐하는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 중국은 6월 20일 현재 3조2천억 달러(3천363조원)의 외환을 보유한 세계 제1의 외환보유국이며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기도 함.
- 인민일보는 이날 전문가 칼럼을 통해서도 미국 채권 보유의 장기적인 위험요소를 우려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음.
-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리상양(李尙陽) 소장은 인민일보 칼럼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달러화 자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며 달러화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음.
- 관영 신화통신도 "미국은 여전히 빚더미 경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디폴트 위험이 여전히 존재 한다"고 비판했음.
- 통신은 "미국은 달러의 평가절하를 통해 빚을 채권자들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를 통해 핫머니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에 대거 유입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음. 통신은 "미국이 부채를 이런 식으로 떠넘긴다면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신화통신은 지난주에는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라"고 미국에 훈수를 둔 바 있음.
- 관영 중앙(CC)TV도 1일 이례적으로 논평을 통해 "미국의 납세자와 세



계의 채권자들은 이번 부채위기가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략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비꼬았음. 중국 정부는 미국이 극적으로 부채협상을 타결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음.

● 美 상원의원들, 對중국 개발원조 중단 촉구(8/5)

- 미국의 일부 상원의원들이 자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많으면서 중국에 대한 개발 원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민주당 의원 8명과 공화당 의원 4명 등 당파를 떠난 12명의 상원의원이 4일 해외원조 기금을 승인하는 상원 세출위원회에 티베트나 인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대(對) 중국 개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3조 달러(약 3천50조원) 이상의 외화보유액을 바탕으로 두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중국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국민을 위해 쓸 재정적 자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양당 간사인 짐 웹(민주.버지니아) 의원과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이 주도한 이 청원은 미국이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를 막기 위한 정부부채 상한 증액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정부지출 삭감이 불가피한 가운데 나와 주목됨.
- 의원들은 중국이 미 국채 1조2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수백억 달러 규모의 해외원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국과 호주는 이미 대 중국 원조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의원들의 청원에 이에 대해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는 중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나섰다.
- USAID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원조 프로그램이 의회의 권한을 받아 법치와 인권, 전염병과 같은 영역을 포괄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목표가 분명하고 계량적이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직접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마. 미·일 관계

● "美日, 안보·경제 신공동선언 포기"(8/1)

- 미국과 일본이 작년 안전보장조약 개정 50주년을 맞아 추진했던 신(新) 공동선언이 사실상 백지화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작년 11월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안전보장, 경제, 문화 및 인적교류 등 3분야에 걸쳐 향후 동맹 50년의 기본방침을 작성하기로 합의했음.
- 양국은 실무 협의를 통해 작성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올해 9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발표하기로 했음. 하지만 일본의 정



- 국 불안으로 간 총리의 퇴진이 예고되면서 미국 방문이 어려워진데다 미국이 중시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동일본대지진을 이유로 참여를 연기하면서 공동선언이 어려워졌음.
- 양국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두 나라 외교 당국자 사이에는 공동선언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미국 측은 최근 일본 측에 9월 초순 일본 총리를 초청한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간 총리를 초청한 것이다면서 새 총리가 취임할 경우 공식 방미 초대가 백지화됐다는 의사를 표시했음.
 - 양국 정부는 새로운 일본 총리가 연내 워싱턴을 방문하더라도 공동선언은 발표하지 않을 방침임.

바. 중·일 관계

● 日, 中 해양조사선 센카쿠 조사활동 항의(8/1)

-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부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중국 해양조사선이 진입한 것에 항의했다고 일본언론이 1일 보도했음.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지난달 31일 오전 7시25분쯤 센카쿠 부근 해역에서 양국의 중간선을 넘어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향해한 것이 해상보안청의 항공기에 포착됐음.
-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센카쿠 주변에서 포착된 것은 작년 3월 이후 처음임. 이 해양조사선은 해역의 수질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임. 일본 외무성은 중국 해양조사선의 조사활동이 사전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서 주일 중국 대사관과 주중 일본 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항의하고, 조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음. 해상보안청에 의하면 EEZ 내에서 연안국의 동의 없는 타국의 어로 및 해양조사활동은 국제조약상 금지돼있음.

● <日 방위백서, 中 해양 진출에 경계감>(8/2)

- 2011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의 특징은 지난해에 이어 중국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웠다는 점임.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지난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갈등을 염두에 둔 듯 "중국 주변 국가와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에서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명기했음.
- 특히 중국의 해양 진출에 경계심을 표시하면서 중국이 베트남 등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레틀리) 문제 등을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향'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음 다뤘음. 또 중국과는 상당히 떨어진 지역인 '중동, 아프리카, 태평양 섬나라, 중남미 국가와 관계' 항목을 신설해 중국 해군 함정의 방문이나 무기 수출에 따른 영향력 확대 문제를 언급했음.
- 일본 정부나 자위대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국제사회의 과제' 맨 위 항목으로 처음으로 배치한 데 대해서도 마이니치신문 인



- 터넷판은 "각국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중국발일 개연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방위성 간부의 코멘트를 전하며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진척됐을 공산이 있다"며 "북한이 개발 중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의 사거리가 약 2천500~4천km에 이른다는 지적도 있어 미국령 괌까지 포함될 개연성이 있다"고 경계했음.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정은씨가 지난해 9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취임한 사실을 전한 뒤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권력 구조의 변화 시기에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음.
 -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며 미일동맹을 한층 강조한 점은 일본 내에서 눈총도 받았음.
 - 일본은 이번 백서에서 동일본대지진 당시 자위대의 활약상과 함께 미군의 '도모다치(친구) 작전'에 지면을 대거 할애한 뒤 미일 간 새로운 연계 가능성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았음. 대신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오키나와(沖縄) 현민의 부담을 줄이고 후텐마 기지의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형식적인 기술에 그쳤음.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미일간의) 혼란은 잊어버렸다는 듯이 일미(미일) 동맹으로 치우치는 민주당 정권의 모습이 반영됐다"고 일침을 놓았음.
 - 러시아에 대해서는 "극동 지역의 전력은 가장 많을 때보다 큰 폭으로 줄었지만 활동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북방영토(남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명칭)를 방문했다"고 적었음.

● 中, 日방위백서에 "강한 불만"(8/4)

- 중국이 일본 방위백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는 입장을 내놨음.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3일 밤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일본 방위백서에 나타난 중국에 대한 언급은 "무책임한 평가"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앞서 지난 2일 발간된 일본 방위백서에는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갈등에서처럼 고압적인 대응이 눈에 띄며, 남중국해에서 중국 군사력이 위협이라는 평가가 게재돼 있음.
- 마 대변인은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가면서 이웃국가를 동반자로 한 외교방침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자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건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아울러 "중국의 발전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 국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어떤 국가에도 위



협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또 "중국은 국방력 강화와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는 완전히 중국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키려는 것이지 어느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음.

- 마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은 역사를 거울삼아 자국의 국방정책을 중심으로 반성하고 이웃국가들과의 상호 신뢰와 지역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음.

● "日, 나포 中어선 선장 2명 석방"(8/7)

- 일본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했다며 나포했던 중국 어선 두 척과 선장 2명을 풀어줬다고 인민일보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음. 인민일보는 주일 니가타현 총영사관 당국자를 인용해 니가타 소재 일본 제9관구 해상보안청이 6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오후 4시 30분)께 해당 선장인 왕푸구이(王福貴)와 정원우(鄭文武)를 석방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전했다.
- 일본 당국은 나포했던 '루룽위(魯榮漁) 1735호'와 '루룽위(魯榮漁) 1736호'도 풀어줘 돌아가도록 했음. 일본 당국은 5일 밤 니가타현 부근의 자국 EEZ에서 중국 어선 두 척을 나포하고 책임자인 선장 2명도 체포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체포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인민일보는 나포 사건 발생 직후 중국의 니가타 총영사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 측과 의견 조정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 일본은 지난해 9월 다펬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부근에서 자국 순시선과 충돌을 일으킨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한 사건을 계기로 중·일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해 6개월 가량 정부간 교류 중단으로 이어진 바 있음. 올들어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을 계기로 중일 관계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며, 일본의 이번 중국 어선 선장 조기 석방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임.

사. 기. 타

● 日 "한미일 3국 공동 훈련해야"(8/5)

- 미국에 이어 일본도 한미일 공동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의 '조직 개편과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 위원회'(위원장 오가와 가쓰야(小川勝也) 방위성 부대신)는 최근 '필요에 따라 한미일 3국 공동 훈련 등 새로운 훈련을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리했음.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해 12월9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일본까지 3국 공동 훈련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초 "지금도 인도적 차원의 훈련은 일본과 함께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공동 군사훈련의 필요성은 느



까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정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한미일 공동 훈련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 이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일본 전역의 육상자위대를 통합 지휘할 조직을 만드는 방안과 중국과 대립하는 난세이(南西)제도를 지키기 위해 미군과 민간 수송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명기됐음.
- 방위성 위원회는 또 일본이 지난해 말에 만든 신방위계획대강에서 내건 '동적 방위력'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논의했지만,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영 등 과제는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결론을 미뤘다고 통신은 전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